

지정학의 '재생산': 김정은시대 북중관계와 북한의 대응 - 『로동신문』(2009-2018) 중국관련 보도에 대한 분석 -

박 동 훈*

- I. 문제의 제기
- II. 분석자료 및 방법
- III. 중국관련 보도의 주요특징:
양적 변화 추이
- IV. 중국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V. 지정학의 '재생산':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VI. 결론 및 시사점

국문요약

이 연구는 로동신문(2009-2018) 중국 관련 기사를 통해 북한의 중국 관련 담론들을 살피고 북중관계 변화와 북한의 대응을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첫째, 철저한 프로파간다 전략이 구사되면서 로동신문에 반영된 중국의 표상은 중국의 현실 그 자체보다는 북한의 당의 노선과 정책이라는 기본 프리즘에 의해 여과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2014년 7월부터 로동신문 중국관련 기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는 시진핑 중국 주석 방한이 북한의 민감한 신경을 건드렸음을 말해준다. 북중관

계에서 한국은 하나의 변수로 작용한다. 셋째, 북한은 중국에 대해 이른바 '지정학 재생산'이라는 대항담론과 그에 상응하는 행동들을 통해 자신의 지정학적 가치와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고자 한다. 넷째, 초강경태세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정세에 대한 완급조절, 그리고 북중 간에 존재하는 전통적 수단들을 통해 북중관계를 관리하고자 한다.

주제어: 북중관계, 지정학, 로동신문

* 중국 연변대 국제정치학과 부교수

I. 문제의 제기

북중관계는 복잡한 동북아정치구도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해 오면서 줄곧 학계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왔다. 그러나 북중관계의 성격을 명쾌히 규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북중관계에 관한 한국학계의 논의들을 거칠게나마 구분해 보면 주로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구조론 또는 지정학적 시각이다. 중미경쟁이라는 구조적 조건하에서 전략적 완충지대(strategic buffer zone) 또는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으로서의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중국에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에 대해서 거의 공통된 합의점이 존재한다. 한반도의 불안전성, 미래상황 전개에 불확실성(북한의 붕괴, 미국에 대한 의구심, 북한 의도에 대한 의구심)과 책임대국으로서의 ‘명성’(reputation)이라는 3가지 요인이 중국 대북정책을 제약하고 있으며¹ “영향력을 행사할수록 영향력이 감소”되는 딜레마 상황에서² 중국은 “동맹과 정상,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형태로 변모시키고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선택적으로 양자의 균형을 모색”한다는 것이다.³

북중관계 연구에서 또 다른 한 갈래 흐름은 이른바 ‘동북4성론’으로 대변되는 북한의 중국 종속론이다.⁴ 중국의 급속성장과 이와 동반되는 북중 경제협력 강화는 고립된 북한의 자생적 성장 가능성을 억제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확대시키면서 북한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물론 이러한 견해들은 중국의 대북영향력 한계와 자주성을 강조하는 북한의 수용논리를 간과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⁵ 특히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로 북중관계에 난기류가 발생하면서 관련논의가 잦아들기도 했다. 그러나 종속론은 한국 내 좌파 우파나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민족주의적 프리즘을 통해 문제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상당한 담론적 공간이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네거티브(negative)식 담론이 최종심급에서 북중관계 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결정짓는 인식론적 틀로서 빈번

¹ 최명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북·중 관계,” 『국방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2009), p. 135.

² 이희옥,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과 북중관계의 ‘재정상화,’” 『중소연구』, 제3호 (2018), pp. 7~39.

³ 문홍호,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대북정책: 선택적 균형전략의 최적화와 공세적 한반도 영향력 경쟁,” 『현대중국연구』, 제20집 3호 (2018), pp. 15~35.

⁴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남성욱,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45호 (2006).

⁵ 이희옥, “중국의 대북한정책 변화의 함의: 동북4성론을 논란을 포함하여,” 『현대중국연구』, 제8집 제1호 (2007).

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⁶

북중관계에 관한 한국학계의 상기 두 갈래 흐름을 보면 지정학적 시각은 중국학 연구자들에 의해, 종속론은 북한학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는 성향이 있다. 중국학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대북정책이라는 기본 틀 내에서 ‘지정학 변인’을 양자관계 모든 변화의 독립변수로 간주하는 구조론적 사고를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종속론자’들은 경제적 영역에서의 북한의 대중의존도를 중심으로 정치적 종속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다소 음모론적 시각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을 경계하고자 한다. 그러나 상기 두 갈래 연구흐름의 공통된 문제점은 북중관계에서의 북한변수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지 한반도 상황의 전개를 살펴보면 북한의 공세적이고 선제적인 대외행보들로 인해 정세변화가 크게 요동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북한의 행위는 단지 ‘반응적’(Reactive)이 아닌 생존과 안보를 추구하는 ‘적극성’을 띠고 있으며,⁷ ‘떼쓰며 우는 아이’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논리성과 합리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중 양국의 비대칭관계 속에서도 주체성과 자주성을 국가의 이념으로 간주하는 북한의 행보에 의해 중국의 대북 인식이 변화해왔다는 점에서도 양자관계 속 북한요인의 역할에 대해 충분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⁸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북중관계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한 유익한 보충의 일환으로 중국과 관련해 북한이 내부적으로 형성하는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북중관계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와 정책적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중국 관련 담론들을 살피는 작업을 통해 중국 또는 국제사회에 던지는 북한의 정치적 메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주로 다음의 문제들에 대답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⁶ 차문석, “북·중 관계의 역사와 현재: ‘북한의 중국 종속론’ 비판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2권 제1호 (2006).

⁷ 최명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북·중 관계,” pp. 120~121.

⁸ 북중관계 관련 연구에서 북한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당히 드물다. 대표적인 연구로 김용호, “비대칭동맹에 있어 동맹신뢰성과 후기동맹딜레마: 북중동맹과 북한의 대미접근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36호 (2001); 장용석, “북·중관계의 성격과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 『통일과 평화』, 4집 1호 (2012); 황지환, “북중관계와 북한의 대중정책,” 『성균치이나브리프』, 제2권 3호 (2014) 등을 들 수 있다. 김용호는 한중수교 등으로 인한 중국의 동맹신뢰성 저하와 이로 인한 북한의 후기동맹딜레마가 결국 북한의 대미접근을 유도했고 미국이 북중동맹에 또 다른 의미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장용석의 경우 북중관계는 혈맹이라기보다 전략적·비대칭적 협력관계이며 북한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화와 미중 간의 경쟁을 주목하면서 자신의 지정학적 가치를 부각시킨다고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중국관련 보도는 어떠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가. 둘째, 중국은 북한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셋째, 중국에 대한 북한의 담론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넷째, 대중 인식 변화와 함께 북한은 어떠한 대응논리를 펼쳐왔는가 등이다.

II. 분석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대응담론을 살펴보기 위해 로동신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로동신문은 북한노동당 기관지로 북한정부의 공식입장을 대표함과 동시에 다른 언론매체의 기준이 되고 있다.⁹ 로동신문은 호소성과 선동성이 강하고 북한당국이 주도하고자하는 사회적 담론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또한 북한 여러 언론사들에 대비하여 중국과 관련된 기사를 가장 많이 보도하고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북한의 중국에 관련된 견해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분석 가치를 지닌다. 특히 로동신문은 정론성을 지향하면서도 긍정 혹은 부정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도하는 특징이 있기에¹⁰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분석시기를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10년으로 설정했다. 2009년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후계체계 구축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던 시기였고 또한 북중관계도 새롭게 정립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2012년 북중 양국 지도자들이 교체된 이후 특히 북의 연이은 핵·미사일 실험과 중국의 이에 대한 이례적인 강경대응으로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북중관계는 2018년 한반도 정세 완화와 함께 또 다시 복원되기 시작했다. 환언하면 2009년부터 2018년 사이 북중 양국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협력-갈등-협력의 세 단계를 거쳐 왔다는 것이다. 2009년부터 2012년은 정치에 입문한 김정은의 대중인식 형성단계라 할 수 있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김정은 집권 이후 양국 간 전략적 이해차이로 갈등이 표출되던 시기로 북한 중국 인식의 속살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본 연구의 중점을 두고자 한다.

⁹ 신정화, “김정일정권의 대일정책: 「로동신문」과 「조선신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 회보』, 제24집 1호 (2011).

¹⁰ 주정화, “로동신문을 통해 본 김정은 정치스타일,” 『사회과학연구』, 30권 2호 (2014), pp. 55~80.

분석을 위해 대상기간 동안 로동신문 지면에 실린 기사 중 '중국'을 검색어로, 그 중에서 중국을 주요 보도 대상으로 한 관련 기사들만 추출했다. 언론을 통한 프로파간다에는 특정한 사건, 이슈나 쟁점의 보도 여부, 특정한 사실에 대한 강조와 축소 여부 및 특정한 논리, 입장과 태도의 부각 또는 외면여부 등 다양한 담론 전략이 동원된다.¹¹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중국 관련 보도의 양적 변화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북한의 중국에 대한 기본 시각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양적 방법론에 따른 연구를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로동신문에 실린 관방 공식입장, 로동신문의 사설, 논설에 대한 정성분석을 함께 진행하고자 했다. 분석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담론이 생산되는 맥락, 즉 역사적 구조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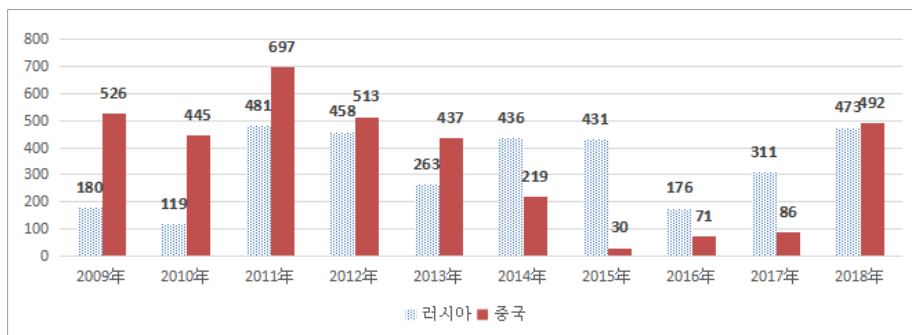
Ⅲ. 중국관련 보도의 주요특징: 양적 변화 추이

1. 중국관련 기사의 빈도 변화

북한은 언론을 통해 대외정책의 입장과 태도를 부각시키고, 내부적 선동을 통해 사회적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담론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언론보도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북중관계의 내면,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인식을 읽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우선 로동신문의 중국관련 보도의 양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북중관계 변화가 중국 관련 기사 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중국 관련 보도의 양적 변화 추이만 집계할 경우 파생될 수 있는 단선적인 해석을 피하고 보다 입체적인 분석시각을 갖기 위해 중국관련 기사와 2008년 6자회담 퇴출 이후 국제적 고립 상태에도 여전히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던 러시아에 대한 보도의 양적변화를 비교했다.

¹¹ 선상신·김성해, “북한 언론과 대외정책: 6자회담 보도를 통해서 본 북한 엘리트의 프로파간다 전략,” 『북한학연구』, 제7권 제1호 (2011), p. 270.

〈그림 1〉 중국과 러시아* 관련 보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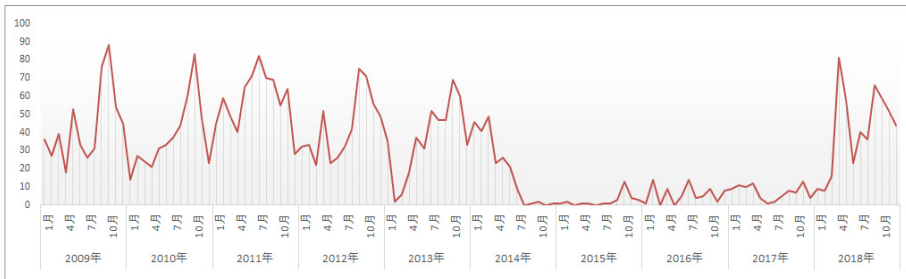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연구의 필요상 러시아 관련 보도 빈도수만 집계하고 구체적인 내용분석은 진행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비교적 의미 있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북중수교 60주년을 맞는 2009년 로동신문 중국 관련 기사는 총 526건으로 거의 러시아 관련 보도의 3배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은 2010년까지 유지되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2011년부터 로동신문의 러시아 관련 보도의 양이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중국관련 보도가 여전히 러시아를 우세했다. 이러한 상황은 2014년에 이르러 역전된다. 2014년 현재 러시아 관련 보도가 426건인 반면 중국관련 보도는 219건으로 급격히 줄어들며 러시아의 절반수준에 이른 것이다. 그 이후 북중관계가 회복되는 2018년에 이르러서야 중국 관련 보도가 다시 러시아를 우세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 제3차 핵실험과 일련의 강경조치들에 의해 국제사회에서 고립상태에 빠진 북한과 크림반도 합병 및 시리아 내전으로 서구국가들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러시아간에 전략적 협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로동신문에 러시아 관련기사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것은 가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왜 2014년을 기점으로 중국관련 보도가 급격히 줄어들었는가라는 점이다. 빈도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기위해 로동신문 중국관련 기사를 월(月)별로 집계해 보았다(〈그림 2〉 참조).

〈그림 2〉에서 보듯이 로동신문 중국 관련보도의 빈도수는 두 개의 시점을 계기로 큰 하락폭을 보였다는 것이다. 첫째는 2013년 2월과 3월 중국기사 빈도수는 각각 2건과 6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2012년 12월 북한의 ‘은하 3호’발사와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2087호(2013.1.22.), 2094호(2013.3.7.)에 중국이 적극 동참한 것과 연관될 수 있다. 그러나 4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중국 관련 기사는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림 2〉 중국 관련 보도 변화 추이



자료: 저자 작성

두 번째는 2014년 7월이다. 2013년 4월부터 일반수준을 유지했던 중국기사가 이 시점을 계기로 급격히 줄어들고 2018년 3월 김정은 방중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탄력을 받지 못했다. 특히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중국기사 보도 건수는 총 215 건이었지만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의 보도 건수는 겨우 4건에 불과했다. 그 이후 2015년 보도 건수는 30건, 2016년에는 71건, 2017년에는 86건에 불과하여 월 평균 10건을 초과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로동신문의 중국관련 보도가 급격히 줄어든 시점은 왜 하필이면 2014년 7월이었을까. 실지 2014년 7월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한 시점이다. 중국의 신임지도자가 북한을 먼저 방문한 이후 한국을 방문하던 관계를 깨고 시진핑 주석이 7월 3일 우선먼저 한국을 방문했던 것이다. 중국의 대 한반도정책 조정 및 한중관계 강화가 북한 지도부의 민감한 신경을 건드린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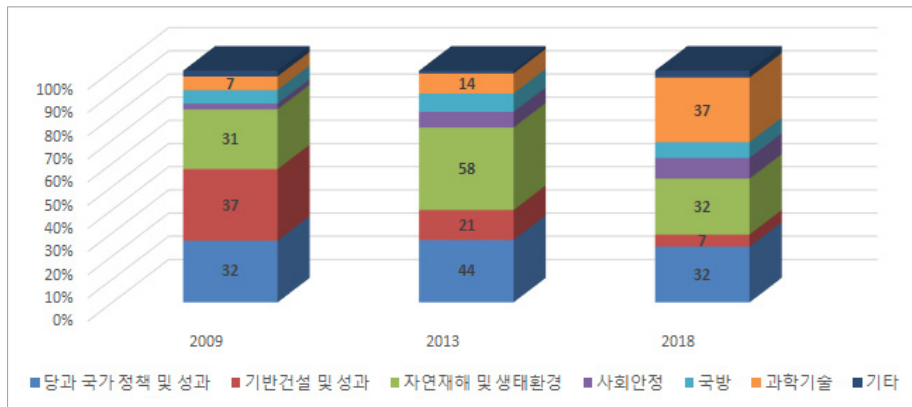
2. 보도내용의 유형변화 추이

중국관련 보도를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 관련기사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북한학자들은 언론에는 정치사상교양자료, 경제교양자료, 문화교양자료, 정세교양자료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천명한다.¹² 중국관련 보도는 응당 정세교양자료에 해당될 것이다. 국제정세자료는 일반적으로 북한 지도자에 대한 흠모자료, 투쟁성과 소개자료, 국제공산주의운동 투쟁자료, 신흥국가·발전도상국들의 새생활 투쟁자료, 자본주의국가의 노동운동자

¹² 김영주, “『로동신문』에 나타난 대남보도 논조 분석: 2008년 이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0권 4호 (2010), p. 83에서 재인용.

료, 제국주의국가의 음모·죄행 폭로자료 등이 취급되어왔다.¹³ 이상의 분류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수집된 자료들을 크게 중국 국내소식(사회주의 각 건설분야 투쟁 성과, 기타 사건·사고), 중국의 대외관계(중국과 기타 국가들 간의 협력과 갈등관계), 북중관계(지도자들 간 교류, 정치·경제·문화·군사 등 영역의 교류와 각종 기념 활동)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림 3〉 중국 국내기사 보도 변화 추이



자료: 저자 작성

우선, 중국 국내소식 보도는 중요정치 소식과 기반시설 건설 및 민생개선, 자연재해·환경오염과 퇴치운동 성과, 사회적 안정을 위한 노력 등 내용들이 포함된다. 2009년, 2013년, 2018년 국내소식 관련 보도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¹⁴ 국내 중요 정치소식은 국내소식 보도 전체량의 1/4정도로 중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선 국가지도자들의 정책동향, 국내 중요정치행사, 사상 및 당 건설성과 등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300-500자 내외의 단편기사 형식으로 로동신문 제6면에 실리고 있다.

경제영역 투쟁성과들은 주로 기반시설 건설소식을 통해 전해진다. (고속)철도, 수리시설, 발전소, 살림집 조성 등 기반건설 소식을 50-150자 내외 단편기사 형태로 소개한다. 주로 중국 서부지역들에서 기반건설을 통해 ‘빈궁청산’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맥락으로 보도되고 있다. 관련 기사는 2009년 37건에서 2018년

¹³ 김영주, 앞의 논문, p. 84.

¹⁴ 2014년 7월 이후 중국 관련기사가 급격히 줄어든 관계로 각 연도별로 비교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국 관련 기사가 집중된 2009년, 2013년, 2018년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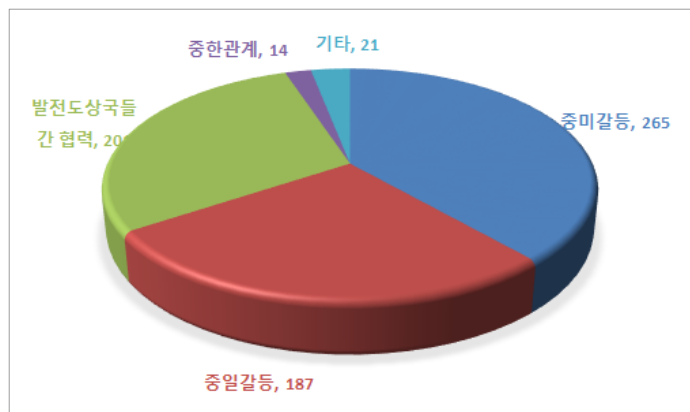
7건으로 줄어들었다. 자연재해(큰물피해, 가뭄, 지진, 태풍, 전염병 등)의 심각성을 소개함과 동시에 생태환경 개선(환경오염, 산림복구, 습지건설)을 위한 노력들도 단편기사 형태로 짧게 소개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림조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¹⁵ 관련기사 역시 해당년도 국내기사 전체의 1/4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기사 유형변화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과학기술 발전성과를 소개하는 부분이다. 즉 2009년 과학기술 관련 보도는 7건에서 2018년 현재 37건으로 그 비중이 5.8%에서 27.8%로 현저히 증가했다. 물론 과학기술 발전성과 보도 중 위성발사 관련 소식이 37.8%(2018)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유선 원격조종 수중 로봇·무인기·인공지능 등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최첨단 기술들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의 대외관계 관련 보도는 주로 중미관계, 중일관계, 중국과 기타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로 대분될 수 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보도된 중국 대외관계 관련 기사 총 674건에서 중미관계 관련 보도는 39.3%(265건)를 차지했고, 중일관계는 27.7%(187건)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미일 간 갈등을 소개하는 관련 기사가 전체 대외관계 기사의 2/3수준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총체적으로 중국과 미일 간 갈등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 로동신문의 기본평가이며 이러한 기사들은 대체로 1,000-2,000자 내외로 관련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특히 중미 무역 갈등이 폭발하면서 2018년 로동신문에 실린 중미갈등 관련 기사는 88건에 달했다. 중국과 발전도상국들 관련 기사는 총 201건으로 전체 대외관계 관련 기사의 약 1/3을 차지한다. 중국과 발전도상국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중국과 쿠바, 파키스탄 등 발전도상국들 간 협력관계를 50-100자 내외의 단편기사 형태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사가 중국과 개발도상국 간 관계의 절대대부분을 차지한다. 둘째는 중국과 러시아 등 브릭스(BRICS) 국가, 상해협력기구 성원국들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조하는데 이러한 기사는 비록 양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보다 상세하게 다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미국의 일방주의, 패권주의에 대처하여 중러 간 전략적

¹⁵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산림조성에 있어 수림화와 원림화를 더욱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2009년부터 북한 내 산림자원(토지, 동·식물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단기 산림전략을 수립하였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북한 산림생태 및 환경변화에 적합한 조립수종 선정 연구,” 연구보고서 (2014), p. 27.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¹⁶ 경제발전 속도에서도 서구 국가들을 능가하는 브릭스
 성원국들이 협조하면서 서구주도 국제질서 도전의 경쟁자로 되고 있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¹⁷ 그 외 ‘중국’이라는 검색어가 들어간 한중관계 관련 기사는 총 14건으
 로 주로 ‘사드’문제를 둘러싼 양국 갈등 및 한국의 ‘사대외교’가 주를 이루었다.

〈그림 4〉 중국 대외 관계 기사 특징



자료: 저자 작성

셋째, 북중관계 관련보도는 주로 정상들 간 교류(축전, 조전, 특사파견, 상호 방
 문), 정부 주요부문 간 교류(외교, 군사, 경제, 문화 등), 각종 사회단체 대표단 파견
 (장애인, 청년단체, 언론, 출판사, 연구기관 등)과 기념행사(우호조약체결, 수교기
 념일 등), 항일유족 방북소식 등이 포함된다. 2012년 12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2013년 초 제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중교류 관련
 기사들도 대폭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고위층 간 교류 및 외교 관련
 소식은 기타 영역의 교류에 관한 보도들에 비해 그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실지 관계악화 단계인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건국일 기념행사, 전당대회
 개최 등을 계기로 양 정상은 총 18차례 축전과 답전(答電)을 서로 주고받았음으로
 동신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북한의 핵노선
 을 놓고 양자 간에 첨예한 대립관계를 형성했지만 어디까지나 양국 정상들 간, 특히
 당적 차원에서의 교류의 고삐는 놓지 않았다.

¹⁶ 예를 들어 “전략적목적 실현을 위한 관계강화 움직임,” 『로동신문』, 2013.7.15., 제6면.

¹⁷ 예를 들어 “날로 활발해지는 브릭스성원국들의 협조움직임,” 『로동신문』, 2018.6.24., 제6면.

IV. 중국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물론 단지 중국관련 기사의 양적인 변화만으로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북한은 아직까지 전통사회주의 국가의 뉴스개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다. 즉 북한 언론들은 사실의 객관적 진술보다는 당의 정책이나 노선을 대중예로의 해설침투 및 선전선동 기능을 우선하고자 한다. 북한은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하기 위해 “자주성의 원칙에서 독자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남조선 및 국제정세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천명하는 권위 있고 무게 있는 사실·논평들을 많이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⁸ 이런 맥락에서 로동신문에 게재된 북한의 공식입장, 그리고 국제정세와 관련된 사실·논평 등에 대한 분석은 북한의 중국에 대한 기본 생각과 대응양상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1. 제2차 핵실험 이후: 공정성 원칙을 위배한 유엔안보리와 조중친선

2009년은 북중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였다. 2008년부터 양국은 2009년을 “조중 친선의 해”로 규정하고 경제문화교류를 강화할 데 대해 합의했다. 또한 국제 금융위기,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 악화, 북한 후계체제 구축 개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중국의 대북정책이 새로운 변화를 보이던 시기였다.¹⁹ 바로 이러한 시점에 북한은 2009년 4월 ‘광명성 2’호를 발사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대신 ‘의장성명’(4.14)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여전히 6자회담 재개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북한 외무성은 4월 15일 곧바로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안보리가 “미국의 강도적 논리를 그대로 받아 물었다”고 비난하면서 6자회담 퇴출과 함께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선포했다.²⁰

이 시기 북한의 중국에 대한 불만은 ‘유엔안보리’라는 상대적으로 모호한 개념을 통해 표출되었고, 또한 ‘유엔안보리’와 ‘미국 및 그 추종세력’을 분리시켜 안보리를 미국주도하에 ‘도용’되는 도구적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유엔안보리를 “미국

¹⁸ 조선로동당출판사,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해설』(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p. 77~81, 87.

¹⁹ 2009년 북중 협력 강화의 배경에 관해서는 박동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중국과 한반도』(파주: 한국학술정보, 2014), pp. 146~166 참조.

²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로동신문』, 2009.4.15., 4면.

과 추종세력에 농락”당하여 “불공정성과 이중기준, 전횡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난하면서²¹ “자주적인 국방력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²² 결국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이에 유엔 안보리가 제1874호 대북제재 결의를 통과시키자(6월 12일) 북한 외무성은 “플로트늄 무기화, 우라늄 농축 착수” 등 강경조치를 선포했다.²³ 또한 북한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와 방식은 당사자인 우리가 제일 잘 알게 되어있다.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방식은 따로 있다”²⁴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6자회담 복귀 요구를 거부했다. 요컨대 북한은 제2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의 대북 공동성명 및 제재결의안에 불만을 표하며 그동안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어렵사리 구축해 놓은 ‘6자회담’이라는 플랫폼을 거부했다. 단 유엔안보리라는 보다 모호한 대상을 비난했을 뿐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그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았다.

10월에 이르러 북중관계는 다시 완화모드에 돌입했다. 로동신문은 “중국인민의 친선의 사절”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어 북중수교 60주년 즉 ‘조중친선의 해’ 폐막식 참여차 평양을 방문한 중국 국무총리 원자바오(溫家寶)를 환영했다.²⁵ 실제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북중 양국 간 경제, 인문 등 다양한 영역의 교류가 활성화되었고, 양국관계는 한중수교 이후 최상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²⁶ 이러한 북중 간 밀착관계는 2012년까지 유지되었다. 2012년 4월 16일, 북한 ‘은하-3호’ 발사에(실패) 대해 유엔 안보리가 규탄성명을 발표하자 북한은 성명을 통해 유엔안보리가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 도용”되었다고 비난하면서도²⁷ 북중관계는 여전히 “폭넓게 발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²⁸

²¹ 리현도, “불공정성과 전횡의 극치, 단호한 정치적 결단,” 『로동신문』, 2009.4.19., 6면; 리현도, “천만부당한 이중기준정책은 끝장나야 한다,” 『로동신문』, 2009.5.2., 6면.

²² 채일출, “유엔은 특정세력의 지배주의야망실현에 도용되어서는 안된다,” 『로동신문』, 2009.5.4., 6면.

²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로동신문』, 2009.6.14., 2면.

²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로동신문』, 2009.7.28., 4면.

²⁵ “사설: 중국인민의 친선의 사절,” 『로동신문』, 2009.7.28., 4면.

²⁶ 이 시기 북중 인문교류에 관해서는 이기현 외,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p. 51~97참조. 북중 경험의 추진과정에 관해서는 박동훈, “김정은 시대 북한 체제개혁의 과제: 포스트 마오시기(1976~1978)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집 (2013), pp. 179~209참조.

²⁷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로동신문』, 2012.4.18., 7면.

²⁸ “조중친선은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재부,” 『로동신문』, 2012.7.11., 6면; 리경수, “영원히 푸르 청청할 조중친선,” 『로동신문』, 2012.10.25., 6면.

2. 제3차 핵실험 이후: 자국 이익타산을 우선하는 이기적인 국가

북중관계는 2012년 12월 북한이 ‘은하-3호’ 발사를 계기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2012년 11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당대회를 통해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은 11월 29일 정치국원 리젠궈(李建國)를 평양에 특사로 파견했고 김정은에 친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북한은 특사 귀국 이튿날인 12월 1일 우주공간기술위원회 명의로 ‘은하-3호’ 발사 계획을 발표했다. 12월 12일 “운반 로켓 ‘은하-3’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한다.

2013년 1월 2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087호 결의안이 통과되자 북한은 중국을 포함한 유엔 상임이사국들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1월 23일 북한 외무성은 대북제재에 대해 유엔 안보리를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맹종 맹동한 결과”, “겹쟁이들의 비열한 처사”라고 비난하면서 다소 과격한 용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9·19 공동성명의 사멸과 조선반도 비핵화 종말”을 선언하고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임을 선포했고²⁹ 국방위원회도 “세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할 큰 나라들까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수아비 국제기구”³⁰로 표현하면서 추가적인 핵실험을 진행할 것임을 예시했다.

특히 이 시점에 개최된 “구성된 정세와 관련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군협의회”에서 김정은은 “여러 유관측들이 문제의 공정한 해결과 사태의 격화를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스스로 인정하다시피 그들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대북제재에 동참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³¹ 그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북한은 이미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예상하고 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예정한 기존 일정대로 초강경 대 강경 대응방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3월 6일 북한은 최고 사령부 명의로 조선정전협정 백지화,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활동 전면중지를 공포한데 이어³² 3월 7일에는 외무성 명의로 “핵 선제 타격권리 행사”를 선언했다.³³ 대북제재 2094호 결의안이 통과되자 “조선반도에는

²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로동신문』, 2013.1.24., 1면.

³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펼쳐 나서게 될 것이다,” 『로동신문』, 2013.1.25., 1면.

³¹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성된 정세와 관련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13.1.27., 1면.

³²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최후승리는 자주권 수호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다,” 『로동신문』, 2013.3.6., 1면.

³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성명,” 『로동신문』, 2013.3.8., 1면.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³⁴ 정부·정당·단체의 특별성명을 통해 전시상황을 선포했다.³⁵

이 시기부터 북한의 중국에 대한 언사(言詞)들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3년 2월 2일, 로동신문은 논평을 계기로 안보리에는 “지난 시기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이중기준에 반발해 나서곤 하던 나라들도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 나라들도 자기의 이득을 위해 미국에 맹목적으로 동조한다는 것을 실증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³⁶ ‘은하 3호’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강화를 계기로 북한의 중국과 러시아 등 우방국들에 대한 시각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고 대북제재 결의는 단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놀아난 결과”인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해관계만 타산”하는 대국들의 이기주의적인 행태에도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중국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지만 북중 간의 고위층교류는 그런대로 유지되었다. 중요 정치행사 때마다 정상들 간 축전이 오갔고 고위급 상호 방문을 이어가며 ‘전략적 소통’의 전통을 유지하고자 했다. 특히 김정은은 7월 29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던 성흥혁명사적지, 회창군 중국인민지원군 렬사용원을 방문하면서 이 지역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³⁷

이 시기 오히려 중국의 북한에 대한 불만이 더 가시적이었다. 김정은 특사신분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귀국직전이 되어서야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 있었다.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2013년 9월 9일 중국 지도부가 김정은에 보낸 축전에서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조선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위업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표현함으로써 김정은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이를 발견할 수 있다.³⁸ 중국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고, 심지어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한반도 안정을 ‘전시상황’에까지 끌고 간 것에 대한 중국의 불만이 증폭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³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성명,” 『로동신문』, 2013.3.9., 1면.

³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 『로동신문』, 2013.3.31., 1면.

³⁶ 리경수, “날강도적인 <제재결의>는 이중기준의 극치,” 『로동신문』, 2013.2.2., 6면; 전영희, “미국의 강권책동에 동조하는 것은 최악이다,” 『로동신문』, 2013.5.3., 6면.

³⁷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승 60돛에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가 자리잡고 있던 성흥혁명사적지를 돌아보시었다,” 『로동신문』, 2013.7.30., 1-6면.

³⁸ 2012년의 경우에는 “오늘 조선인민은 김정은동지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진취적으로 개척하고 분발하여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의 위원장 김영남 동지, 내각총리 최영림 동지에게 중국의 당 및 국가령도자들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로동신문』, 2013.9.9., 1면.

3. 2014년 7월 이후: 미국의 눈치를 보는 잦대 없는 나라

북한의 중국에 대한 입장은 2014년 중반, 즉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전후하여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다소 원색적인 언어들 사용하며 중국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다. 7월 21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주도한 유엔안보리 복잡소동에 일부 주대 없는 나라들도 맹종하여 미국의 구린내 나는 꿈무늬를 따르면서 저저마다 가련한 처지에 이른 박근혜를 껴안아보려고 부질없이 원심을 쓰고 있다”³⁹고 주장했다. 비록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한중관계를 의식한 북한의 민감한 반응이었다.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로동신문 중국관련 보도량이(〈그림 2〉) 급격히 줄어든 것도 바로 2014년 7월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시진핑 국가주석의 서울 방문은 북한 지도부에 상당한 불만을 가져다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북한의 불편한 심기는 한중관계가 급격한 발전을 가져오던 2015년 8월에 이르러 고조된다. 예컨대 8월 13일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명의로 로동신문에 발표된 ‘기념보고서’가 바로 그러하다.⁴⁰ ‘보고서’는 주변 외세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며 그 중에는 “우리와 함께 피를 흘리며 싸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하면서 중국을 지목했다. 또한 “외세가 일방적으로 그 어떤 청탁놀음을 들어주는 자체가…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적으로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분열주의자, 대결주의자들의 청탁”을 받아들일 경우 한반도에서 ‘핵전쟁’ 참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와중에 어떤 핵 불꽃이 조선반도 주변의 어느 곳으로 잘못 튀지는 누고도 모르는 일”이라 경고했다. 실제로 이 시점에 한반도 위기상황은 극도로 심화되고 있었다. 남북은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대북방송으로 신경전이 계속되었고 설상가상으로 8월 4일 DMZ지역 ‘목함 지뢰폭발사건’과 8월 20일 ‘서부 전선 포격사건’이 발생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된다. 8월 20일 김정은은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이른바 ‘48시간 최후통첩’을 한국측에 보내면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맞이했다. 결국 8월 24일 남북 쌍방은 ‘고위급 긴급접촉’을 통해 ‘목함지뢰 폭발’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시, 남측의 확성기 방송 중단 등에 합의 하면서 위기를

³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력강화조치에 대해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한다,” 『로동신문』, 2014.7.21., 4면.

⁴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기념보고서: 조선의 자주통일은 동북아시아 평화변명의 초석,” 『로동신문』, 2015.8.13., 6면.

넘길 수 있었다.

그 이후 한반도 정세가 다소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북중관계도 개선되는 기미를 보였지만 서로간의 신경전은 계속되었다. 북한은 2015년 9월 3일 중국 항일전쟁 전승기념일에 최룡해 총정치국장을 파견했지만 한국을 포함하여 주변국 정상들이 참석한 장소에서 환대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 사이 북한 언론의 대중 보도도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로동신문은 북중 양국 지도부가 주고받는 축전을 북한 지도자 흡모자료 또는 사설 뒤에 1위로 보도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2014년 이후로는 러시아, 쿠바, 시리아 등 국가 정상들이 보내온 축전 뒤로 밀려났다. 2015년 10월 북한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류윈산(劉雲山)이 평양을 방문하며 북중관계 복원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 했지만 같은 해 12월 모란봉악단 베이징 공연 보이콧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6년 1월 6일 북은 제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4. 제5차 핵실험 이후: 어리석은 거인

2016년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최후의 관문’을 향해 강행되고 국제 사회의 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면서 한반도는 최대의 위기국면을 맞게 된다. 특히 북한에 대한 유엔의 강력한 제재에 중국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불만도 고조되었다.

북한은 2016년 1월 6일 “사상 첫 수소탄을 완전성공”한데 이어 2월 7일 다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로동신문은 2월 10일 논평을 통해 “사회경제적 난관이 조성되고 제국주의자들이 압력이 클수록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주권을 더욱 확고히 세워야”한다고 선동했다.⁴¹ 동유럽 나라들의 실태가 보여주듯이 사대주의에 빠지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아무리 엄혹한 시련이 가로놓인다 해도 신심을 잃지 말고 자강력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논리였다. 대북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2월 23일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중대성명을 통해 청와대, 아태지역 미군기지 그리고 미국 본토가 “선제적 작전수행의 타격대상이 될 것”이라 발표했다. 3월 2일 2270호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발표되자 북한은 “이미 예견 된 것으로 별로 놀랄 것도 새로운 것도 없다”고 밝히

⁴¹ 리학남,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다,” 『로동신문』, 2016.2.10., 6면.

면서 물리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총동원될 것이며,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누구도 바라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세력들, 유엔 ‘제재결의’에 가담한 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⁴²

북한의 연이은 ICBM 발사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북은 주로 두 개의 경로를 통해 자체 주장의 합리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첫째는 유엔안보리에 대한 대응이다. 우선 유엔안보리는 “국제법 위에 군림한 열강들의 극단한 이기주의, 지배주의 야망실현의 정치도구로 악용”⁴³되고 있기에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오직 제힘으로 자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로 ‘공화국 정부성명’, ‘외무성’, 통전부 산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의 명의로, 우방국들을 직접 거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둘째, 중국 언론매체들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연구기관이나 논평원 명의로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냈다. 유라시아대륙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전략적 가치는 날로 상승하고 있으며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선 “평양으로 향하는 길은 온 세계에 뻗어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힘에 눌리워 수십 년간 이어온 형제의 우정마저 헌신짝처럼 저버린다면……사방에서 화가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사드’를 막기 위해 대북제재에 동조해 나서면서까지 미국에 양보했지만 결국 “사드”가 한밤중에 기습 배치되는 등 참으로 ‘어리석은 거인’되었다고 비난했다.⁴⁴

유엔의 2371호 대북제재안이 통과된 2017년 8월을 기점으로 한반도 정세는 또 다시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8월 8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이른바 ‘참수작전’을 비난하면서 “선제적인 보복작전”, “정의의 전면전쟁”을 선언함과 동시에⁴⁵ 전략군 사령관 명의로 “증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2’ 4발

⁴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변인 성명: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난폭하게 유린한 유엔안보리사회의 대조선 ‘제재결의’에 단호한 대응조치로 맞서 나갈 것이다,” 『로동신문』, 2016. 3.5.

⁴³ “정의와 공정성을 난폭하게 유린한 유엔의 그릇된 처사,” 『로동신문』, 2016.12.11., 6면.

⁴⁴ 이에 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기념보고서: 조선의 자주통일은 동북아시아 평화변영의 초석,” 『로동신문』, 2015.8.13., 6면; 김철, “조중관계의 기동을 짚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로동신문』, 2017.5.4. 등을 참조할 것.

⁴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분별없는 ‘전쟁불사’광증은 아메리카제국의 비극적 종말 만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로동신문』, 2017.8.9., 1면.

의 동시발사로 궤도 포위사격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선포했다. 8월 29일 '화성 12'형 중장거리 로켓을 시험 발사한 뒤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특히 2017년 9월 3일은 중국의 항일전쟁 전승 기념일이자 중국의 주최로 제9차 BRICS 국가 정상포럼이 중국 샤먼(廈門)에서 개최되던 날이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핵실험은 중국을 상대한 측면이 강했다.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국무위원장 성명을 내고 트럼프의 "완전파괴" 발언에 대해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라 선언한 당일인 9월 22일, 로동신문은 '정필'이란 필명으로 논설을 발표하여 중국의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발언들에 대해 "조선을 한갓 강도의 침입을 막는 앞마당, '완충지대'로나 간주하고 옆집에 강도가 들어도 내 밥그릇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정치적 식객들의 사고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비난했다.⁴⁶

이처럼 2016년과 2017년 사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공세적으로 밀어붙이면서 한반도는 물론 북중 양국도 심한 갈등을 겪게 된다. 중국은 보다 강경한 자세로 대북제재에 임했고 북은 이를 "미제에 대한 굴종"이라 비난했다. 이 시기에는 정부적 차원뿐 아니라 언론을 통한 여론전도 가열화 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중앙당과 지도자 차원에서의 상호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었다. 2016년 5월 중국은 북한 노동당 제7차대회 개최를 계기로 북에 축전을 보냈고, 7월 11일 북중 우호조약 55주년 기념일에도 양국 지도자는 서로 축전을 교환했다. 북한이 중국의 항일전쟁승리 기념일인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북중 관계가 극히 악화되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중국공산당 제19차대회를 계기로 시진핑 총서기에게 축전을 보내며 이는 11월 18일 시진핑 특사 류타오(劉濤)의 평양방문으로까지 이어졌다. 물론 약 열흘 뒤인 11월 29일 북한은 다시 대륙간 미사일발사를 단행하고 그 성공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2018년 2월 8일까지만 해도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국에 "마치 잔치집의 담을 넘겨다보는 그 무엇처럼 비루하기 그지없다"고 비난했던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이 기정사실화 되고 북미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갑자기 북중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결국 3월 25일 김정은이 첫 해외방문지로 베이징을 선택하면서 북중관계는 또 다시 복원 궤도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3월 30일 로동신문은 선대지도자들이 "심혈을 바쳐 수호하고 소중한 유산을 물려준 조중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눈동자와 같이 대하여야 한다"고 선전하기 시작했다.⁴⁷

⁴⁶ 정필, "창피를 모르는 언론의 방자한 처사," 『로동신문』, 2017.9.22., 6면.

⁴⁷ "사설: 조중친선의 새로운 장을 펼친 역사적인 방문," 『로동신문』, 2018.3.3., 1면.

V. 지정학의 ‘재생산’: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지금까지 로동신문에 실린 중국 관련 기사들에 대한 빈도분석과 내용분석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북중관계 현실, 특히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2009년부터 2018년 사이 북중 양국은 그야말로 협력-갈등-협력의 보다 극명하고 대조적인 시기를 경험해왔다. 상대적으로 혼잡스럽고 내적 논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보다 세밀한 고찰을 거치면서 다음의 몇 가지 결과들을 정리해 낼 수 있었다.

1. 철저히 구사되고 있는 로동신문의 프로파간다 전략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북한의 언론들은 사실의 객관적 보도보다는 당의 정책이나 노선을 대중에게로 해설침투 하는 기능을 우선시 한다. 환언하면 로동신문에 반영된 중국의 표상은 중국의 현실 그 자체로 반영되기 보다는 북한의 당의 노선과 정책이라는 기본 프리즘에 의해 여과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은 모두 사회주의 국가들이지만 국가건설의 철학적 기초에 있어서 본질적 차이가 존재해왔다. 예컨대 중국은 개혁개방초기 개인승배에 대한 부정과 더불어 맑스주의의 유물론적 역사관으로부터 경제건설 중심노선의 근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상부구조의 정점에는 여전히 ‘유일영도(사상)체계’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체계 확립의 근거를 주체사상에서 찾고 있다. 주체사상은 맑스주의 유물론을 공식 거부하지는 않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인간개조론’과 ‘사상개조론’을 우선적 위치에 놓아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은 이념적으로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담론구조가 형성되기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다. 실지 로동신문에 보도된 중국의 발전상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관심으로 갖고 있는 ‘삼림 조성’, ‘위성발사’거나 ‘기반시설 건설성과’에 대한 단편적 소개, 그리고 ‘서부지역 빈곤 퇴치’ 및 ‘생태환경 보호’와 같은 기사들이 주를 이루며 개혁개방과 중국 경험에 대한 체계적 서술은 찾아볼 수 없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 기사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디까지나 “대국이면서도 문제가 많은 나라”로 보여지기 쉬운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중국과 개발도상국들 간의 협력강화, 중국과 미일 간 갈등 심화라는 이분법적인 해석을 통해 중국을 ‘반제자주’ 진영의 일원으로 보는 한편, 북중 간 노선갈등이 심화 될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불만을 보다 명확히 하는 동시에 중국관련 기사를 대폭 줄이는 “외면전술”을 구사했다.

2. 북중관계와 한국 변수

북중관계 변화에서 한국요인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강화와 이에 대한 중국의 참여로 인해 북한의 중국에 대한 비난 강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로동신문 중국 관련 기사가 급격히 줄어든 시점은 2014년 7월이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북한의 중국에 대한 불만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실지 북한은 그 이전에도 항상 한중관계가 가까워지는데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물론 중국정부보다는 한국정부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한중관계 진전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8월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개최되자 북은 “정의를 귀중히 여기고 불의를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다 미국과 함께 쥐명박 역적패당과 같은 추종세력들의 온갖 음모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그것을 과감히 짓부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담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⁴⁸ 어찌보면 이는 한중 간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북한의 우려와 중국에 대한 경고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박근혜 대통령 방중 이후인 2013년 7월에도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발언을 통해 “남조선 당국자가 중국을 행각하여 우리를 걸고드는 도발적 망발”에 대해 “저들에 대한 지지를 얻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철면피성과 추태는 정말 역겹기 그지없다”고 비난한 바 있다.⁴⁹ 그러나 2014년 7월 이후부터는 보다 직설적으로 중국을 겨냥했다. 북한은 한중관계를 북중 신뢰관계 훼손의 원인으로 보면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원색적 용어를 동원해 가며 중국을 비난했다.

3. ‘지정학 재생산’ 대항담론과 지정학적 가치의 부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은 중국에 대해 이른바 ‘지정학 재생산’이라는 대항담론과 그에 상응하는 행동들을 통해 자신의 지정학적 가치와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북한은 대외환경에 대해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⁴⁸ “조선인민군 군사대외사업국 대변인대답,” 『로동신문』, 2012.8.11., 4면.

⁴⁹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대답,” 『로동신문』, 2013.7.1., 5면.

즉 자신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 충분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현 세기는 ‘아시아태평양세기’라 할 정도로 세계의 정치, 경제적 중심이 세계 경제대국들이 밀집되어 있는 아태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안보 및 경제이익을 둘러싸고 관련국들 간의 “배척과 포섭, 불신과 화합, 대결과 협력과 같은 움직임들이 일어나면서 지역구도 형성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⁵⁰ (2) 미국 아태전략의 기본 목적은 “군사적 우세에 의거하여 도전하는 ‘위협세력’이나 강국이 출현하는 것을 막고 지배권을 확장하려는 데 있다.”⁵¹ (3) 한반도는 “바로 유라시아대륙(또는 대륙세력)과 태평양(해양세력)의 접경지대”에 놓여 있으며, 미국은 “조선을 첫 침략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반도는 항시적인 전쟁위험이 떠도는 최대 열점지역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⁵²

물론 북한은 자신을 단지 강대국 사이에 끼인 약소국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오히려 핵보유 이후 ‘전략적 지위’의 상승을 강조하면서 “조선반도는 강대국들의 갈등을 부추길 수도, 해소할 수도 있는 지역”이라는 이른바 ‘전략적 요충지론’을 강조하고 있다.⁵³ 이를 북중관계 틀 내에서 해석할 경우 북한은 중국에 전략적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전략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의 ‘전략적 요충지론’은 단지 언사에만 그치지 않고 그대로의 맥락에서 실천되어왔다. 핵·미사일 실험으로 북중관계가 충돌하던 시기 북한은 정전체제 폐기, 전시상황 선포 등 조치들을 취하면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고, 미국에 ‘맹종’할 경우 “핵 불꽃이 조선반도 주변의 어느 곳으로 잘못 튀지 누구도 모르며,” “사방에서 화가 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식으로 중국에 경고했다. 2016년 7월 7일 즉 한미 사드배치 결정을 하루 앞두고 북한은 미국 중심의 국제체제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면 응당 미국에 대한 핵 타격 능력을 가진 조선의 협력관계를 충분히 이용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⁵⁴ 북중관계가 우호적인 분위기에 들어서자 북한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내렸다. 예컨대 시진핑 국가주석 평양방문 이후 북한은 이번 방문이 일본 G20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진행된 것으로 결코 우연치 않으며, “(트럼프의) 대화상대인 습근평 주석에게는 미덥고 진실

⁵⁰ 리경수,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왜 주목되는가,” 『로동신문』, 2012.2.2., 6면.

⁵¹ 강철수,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 『로동신문』, 3.30., 6면.

⁵² 채일출, “미국의 유라시아제패정책은 파산을 면치 못한다,” 『로동신문』, 2009.6.5., 6면.

⁵³ “격동의 동북아시아, 조일합의를 둘러싼 국제정세,” 『조선신보』, 2014.7.2.

⁵⁴ 『조선신보』, 2016.7.7.

한 조선의 최고영도자와 맺은 신뢰와 우의는 그가 추진하려고 하는 대미협상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 힘찬 고무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⁵⁵ 요약하면 북중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 북은 첫째 역내 평화 심지어 중국 본토 안전마저 보장될 수 없으며, 둘째 “평양으로 향하는 길은 온 세계에” 뻗어있기 때문에 필요시 전략노선의 전환도 가능성을 중국에 각인시키고자 했다. 이에 반해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이 강화될 경우에는 이러한 협력관계가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즉 한반도 안정을 우선순위에 놓고 북한의 지정학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는 중국의 전략적 시각을 북은 인지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의 이러한 시각을 역이용함으로써 비대칭적 전략관계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4. 초강경 입장과 정세에 대한 완급조절

초강경태세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정세에 대한 완급조절, 그리고 북중 간에 존재하는 전통적 수단들을 통해 북중관계를 관리하고자 한 측면이 있다. 유의할 점은 한반도 위기상황을 고조 시키는 행동 뒤에는 항상 정세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동반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2009년 제2차 핵실험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북한은 6자회담 퇴출 등 강경대응을 취하면서도 8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방북을 통한 미국인 여기자 석방, 현대그룹 현정은 초청과 이른바 ‘조문외교’를 통한 ‘통미통남’ 정책이 추진되었다.⁵⁶ 2013년 북한 제3차 핵실험 이후 ‘전시상황’ 선포 등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면서도 미국 농구선수 로드만을 초청하여 “전쟁 의사가 없음”을 미국에 전달하고자 했다. 5월에는 다시 최룡해 총정치국장을 중국에 파견하여 “고위층 교류와 소통 강화”의 의지를 밝혔고, 다시 북중 간 전략대화를 통해 6자회담 의지를 갖고 있음을 밝히며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구매 노력을 펼쳤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과 ‘서부 전선 포격사건’으로 북은 “48시간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결국 고위급 긴급접촉을 통해 지뢰사건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추석 이산가족 상봉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민간교류”에 합의했다. 2017년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최후의 관문’ 돌파를 위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김정은은 19차 전당대회를 개최한 중국에 축전을 보내는 등 전통적 소통의 끈을 잃지 않고자 했다. 항상 강경 대 초강경의 맞대응

⁵⁵ 김지영, “류레없는 불변, 불패의 친선관계,” 『조선신보』, 2019.6.23.

⁵⁶ 정성장, “김정은 체제의 경제 개혁·개방 전망과 과제,” 『국가전략』, 제18권 4호 (2012), p. 61.

전략을 구사하는 듯 했지만 어디까지나 유연한 방식을 통해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정세를 관리하면서 중국과의 전통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VI. 결론 및 시사점

북한이 2009년 후계체제 구축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 김정은 집권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급격히 강화되었던 북중관계는 북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진으로 인해 심한 갈등을 겪었고, 일련의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시 '제자리 찾기'를 하는 듯싶다. 지난 10년간 로동신문에 실린 중국 관련 기사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김정은은 집권 8년간 북한 국가지도자의 경제개혁 의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철저한 프로파간다 전략을 통해 북한 자체의 이념과 노선의 틀 내에서 중국의 표상을 그려내려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물론적 역사관에 입각한 맑스주의 '선행이론'을 거부하고 인간개조를 우선하는 북한의 이념 틀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수용하기 어려운 내적 논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어떻게 하면 유일영도체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현재의 경제 건설 노선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가가 현재 북한이 떠안고 있는 중요과제라 할 수 있다.

북중관계에서 한국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북한이 중국에 강한 불만을 표한 바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4년 이후 한중관계 강화에 대해 북한이 또 다시 민감한 반응을 보였음을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었다. 한국과 중국은 북한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다. 남북관계가 경쟁 또는 대립국면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중관계가 강화된다는 것은 북한의 고립감을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은 한중관계 발전에 대해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9년 북중관계 개선 이후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바 있고, 2018년 남북관계 개선 이후 우선 북중 정상회담이 먼저 개최된 점을 고려할 때 중국과 한국 모두 북한 대외국면 타개의 중요 대상국이며 이는 앞에서 논의된 '종속론'이 북한 대외정책을 과소평가 한 측면이 있음을 말해준다.

핵·미사일 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북중 양국 간 갈등이 첨예해짐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당적 차원에서의 교류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중국은 당 대 당 교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설득을 계속하고자 했고, 북한은 당적교류는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그와 상관없이 핵보유의 기본노선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각인시키고자 했다. 양자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북한은 자신의 지정학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식을 통해 양자 간에 존재하는 비대등성을 극복하고자 했다. 한반도문제를 대국들 간 구조적 경쟁의 결과로 귀결시키고 한반도정세의 불안정은 궁극적으로 “불꽃이 어디를 튈지 모른다”거나 “평양으로 향하는 길은 온 세계에 뻗어있다”는 등 은유적 방식을 통해 대항담론을 구성함으로써 한반도 안정을 우선시하는 중국의 전략적 시각을 역이용하고자 했다. 물론 완급 가능한 수준에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북의 이러한 주장은 결코 언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사안임을 강조하고자 했다. 북한의 고집스러운 일련의 행태와 한반도 위기는 중국에 ‘학습효과’를 발생시켰고 이는 2018년 북중관계 개선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북은 단지 강대국 사이 놓여 있는 약소국이 아닌 이른바 ‘지정학적 요충지론’에 근거하여 중미 간의 갈등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는 생존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 제출: 3월 24일 ■ 심사: 5월 6일 ■ 채택: 5월 22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이기현 외.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2016.
 박동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중국과 한반도』.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4.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조선로동당출판사.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2. 논문

- 김영주. “『로동신문』에 나타난 대남보도 논조 분석: 2008년 이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 연구』. 제10권 4호, 2010.
 김용후. “비대칭동맹에 있어 동맹신뢰성과 후기동맹딜레마: 북중동맹과 북한의 대미접근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36호, 2010.

- 남성욱.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45호, 2006.
- 문흥호.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대북정책: 선택적 균형전략의 최적화와 공세적 한반도 영향력 경쟁.” 『현대중국연구』. 제20집 3호, 2018.
- 박동훈. “김정은시대 북한 체제개혁의 과제: 포스트 마오시기(1976~1978)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 선상신·김성해. “북한 언론과 대외정책: 6자회담 보도를 통해서 본 북한 엘리트의 프로파간다 전략.” 『북한학연구』. 제7권 제1호, 2011.
- 신정화. “김정일정권의 대일정책: 『로동신문』과 『조선신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4집 1호, 2011.
- 이희욱.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과 북중관계의 ‘재정상화’.” 『중소연구』. 제3호, 2018.
- _____. “중국의 대북한정책 변화의 함의: 동북4성론을 논란을 포함하여.” 『현대중국연구』. 제8집 제1호, 2007.
- 장용석. “북·중관계의 성격과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 『통일과 평화』. 4집 1호, 2012.
- 정성장. “김정은 체제의 경제 개혁·개방 전망과 과제.” 『국가전략』. 제18권 4호, 2012.
- 주정화. “로동신문을 통해 본 김정은 정치스타일.” 『사회과학연구』. 30권 2호, 2014.
- 차문석. “북·중(北中) 관계의 역사와 현재 : ‘북한의 중국 종속론’ 비판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2권 제1호, 2006.
- 최명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북·중 관계.” 『국방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2009.
- 황지환. “북중관계와 북한의 대중정책.” 『성균차이나브리프』. 제2권 3호, 2014.

3. 기타자료

『로동신문』.

『조선신보』.

북한 내부자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00(2011)년 12월 28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에게 하신 말씀.” 2011.12.28.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북한 산림생태 및 환경변화에 적합한 조림수종 선정 연구.” 연구보고서, 2014.

Changes in North Korea's Cognition to China and Policy Adjustment during Kim Jong Un's Period-- Based on the Analysis of China-related Reports in *Rodong Sinmun* Newspaper (2009-2018)

Piao, Dongxun

How DPRK perceives to China is a key factor o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China and DPRK.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 under the analysis on China-related reports in *Rodong Sinmun* Newspaper: First, see from the view of report frequency, which has decreased significantly since July 2014. Such change means the closer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ROK has brought many negative effects on DPRK's attitude toward China. Second, as far as national image, the raise of a powerful China is devoting itself to maintain social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people's livelihood. Third, along with the intensify of strategic divergence, China is turning from a "friendly neighbor" into the country of "follow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self-interest pursuing". Except for the issue of nuclear missile, there a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spects of the fundamental socialist legal ideology, foreign perceiving and other aspects between China and DPRK. The historical burden formed during the cold war period also has impact on DPRK's perceiving to China.

Key Words: China-DPRK Relations, Geopolitics, *Rodong Sinmun*